

---

# 2021년 인천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

【2021.4.14. 심의 · 의결 完】

# 순서

I. 추진배경 .....	1
II. 추진성과 및 보완사항 .....	3
III.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 .....	5
IV. 2021년 적극행정 추진계획 .....	7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	7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체계 강화 .....	12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14
④ 시민체감 적극행정 문화 확산 .....	21
⑤ 소극행정 혁파 .....	24
V. 2021년 예산 .....	26
VI. 행정사항 .....	26

## [참고자료]

1. 적극행정 추진체계 .....	27
2.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	28
3. 적극행정 제도 운영 흐름도 .....	29
4. 적극행정의 정의 및 판단기준 .....	30
5.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	32
6.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	33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19.8. 시행, '20.8. 개정)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19.12. 제정, '20.12. 개정)
-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21.3.)

**【적극행정 정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공공의 이익 : 업무의 목적과 처리방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
  - 창의성 :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
  - 적극적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

-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시장님 결재, '21. 2. 24.)

- (추진배경)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를 위해 정부방침 보다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을 先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
- (주요내용)
  - ✓(유인효과 강화)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인센티브 9종 ⇒ 10종으로 확대(포상금 신설) \*인천시 자체
    - 신청인원에 따라 선발 ⇒ 사전 선발규모\* 설정 **신규** 및 엄정한 기준 마련
      - \* 상·하반기 총 25명 내 특별승진(1) 특별승급(1), 성과급S(3), 실적가점(6) 등
  - ✓(확실한 보호와 지원)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보완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 **신규**
      -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소송 시 변호인 보수 등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수 확대(13명 ⇒ 30명)로 공정성·전문성 확보
    - 의견제시 제도 활용 등 위원회 현안심의 강화(회의개최 3회 ⇒ 6회)
    - 적극행정 실무편람(매뉴얼) 제작 **신규**
  - ✓(시민체감도 제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과제발굴로 시민체감 제고
    - 저인망식 우수사례 발굴·확산(전국사례 도입 검토 및 월보 제작·공유 등)
    - 인천시 맞춤형 적극행정 교육(제도안내 ⇒ 민간전문가 사례교육)
    -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 \* 시민추천 ⇒ 시민추천 + 의견수렴(투표) + 결과 공개
- (향후계획)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안부, 21.3.8.) 반영하여 「인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3월 중)

## □ 기존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19.2.10.)
-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함.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 (대통령, 국무회의, '20.3.17.)

## □ 강력한 유인책으로 파격적 인센티브 확대 강조

### ○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자치단체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중 50% 이상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 실적가점을 의미하며,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부여실적에서 적극 고려

### ○ 중앙부처에 비해 미흡한 지자체의 파격적 인센티브 개선 촉구 (BH 수석비서관, 적극행정 시·도 책임관 회의 '20.9.28.)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구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국외훈련	합계
2019	12	30	32	7	81
2020	36	57	121	6	220

\* 시·도 현황 : 특별승진 2, 특별승급 3 등

## □ 적극행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애요인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 부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공직자 및 외부 전문가 인식조사]

- ❖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 대한 공직자 인식 조사 결과 : 공무원에 대한 보호 부족(38%), 전담조직 및 인력부족(23.7%), 인센티브 부족(19.4%)
- ❖ 적극행정 활성화를 가로막는 개인적 요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인식 : 처벌(면책여부 불확실성 등)에 대한 두려움(27%), 개인적 동기 및 유인 부족(24%), 책임의식 및 사명감 부족(16%)

<적극행정 활성화 장애요인 분석>(감사원, '19.10)

### □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

-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19.7. 혁신과, 혁신과장)
- 적극행정 실행계획('20.2.) 및 변경계획('20.6.) 수립 추진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20.2.) 및 운영(3회, 서면회의)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선발) '19년 7명, '20년 19명(상반기 14명, 하반기 5명)
- (인센티브) '19년(가점4, 휴가3), '20년(상반기가점3, 교육훈련1, 휴가10, 하반기가점1, 휴가4)

### □ 적극행정 교육 및 공직문화 확산

- 시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교과목 편성(신임양성과정 등 3개 과정) 및 퇴직공무원 활용 교육 운영(강사 2명, 군·구 맞춤형 사례교육 8회)
- 주 1회 적극song 홍보, 시 홈페이지 내 코너 운영, 리플렛, 카드 뉴스 제작·배포 등

### □ 사전컨설팅 적극 시행('19년 41건, '20년 42건)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 마련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적극행정의 면책 기준을 완화하고 감사현장에서 면책심의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19. 7.31.) 및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감사 시 면책할 수 있는 근거('19.12.9.) 마련

### □ 적극행정 유인효과 미흡

- 우수공무원 선발인원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조치는 미흡
- 사전 선발규모 없이 신청인원에 따라 선정하여 유인책 부족

#### ➔ 파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유인효과 강화

- 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 설정
- 엄정한 선발기준 마련으로 신뢰성 확보

### □ 공무원 보호제도 미비,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 필요

-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호 제도 보완

#### ➔ 확실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인천형 적극행정 제도 정비

-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先수립, 정부지침 반영 실행계획 後보완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
  -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소송 등의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로 공정성·전문성 확보
- 의견제시 제도 활성화 등 현안심의 강화

### □ 시민참여 부족과 적극행정 체감도 저조

- 정부 적극행정 “온”,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등 플랫폼은 구축했으나 일상적인 시민 참여단계까지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
- 우수사례 정부 경진대회 본선 미진출 등 시민체감 할 수 있는 사례 발굴 미흡

#### ➔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과제 발굴로 시민체감 제고

- 혁신과제 발굴 TF 연계 중점과제 선정
- 저인망식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정 전 과정에 시민 참여 확대 및 홍보 강화

### Ⅲ

##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내용

### 1

### '21년 추진방향

#### 목표

###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

#### 전략

- I.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 II.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III.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부담경감
- IV.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V.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 5대 추진방향 16개 추진과제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③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운영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보상체계 강화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②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운영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④ 시민체감 적극행정 문화 확산	①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②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체계 구축 ③ 시민 참여 확대 및 적극행정 불협 조성
⑤ 소극행정 혁파	① 소극행정 엄정 조치 ② 소극행정 예방 ③ 인·허가 거부시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구분	기존('20년)	개선('21년)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월, 내·외부 13명</li> <li>- 회의 개최 (3회)</li> </ul> </li> <li>■ '20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중 2개 완료로 성과 미흡</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원회 기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 정수 확대(13명→30명)</li> <li>- 격월개최(3회→6회 이상), 현안심의 강화</li> <li>- 결과공개, 공기업 자문 <b>신규</b></li> </ul> </li> <li>■ <b>혁신과제 발굴 TF연계 중점과제 선정 및 운영</b>(실적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 등)</li> </ul>
보상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인원은 '19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나,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조치는 미흡</li> <li>■ 내부(팀장급) 실무심사위원회 구성</li> <li>■ 시민참여 미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 선발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인원 설정</b>으로 유인책 강화</li> <li>■ 선발대상에 공무원, 비정규직 등 모든 구성원 포함</li> <li>■ 직원들이 원하는 <b>다양한 인센티브</b>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금 신설 <b>신규</b></li> </ul> </li> <li>■ <b>실무심사위원회를 내부(팀장급) 및 외부 전문가로 확대</b>하여 전문성·공정성 확보</li> <li>■ 우수사례(공무원) <b>시민추천제</b> 활성화</li> <li>■ <b>시민온라인 심사(투표) 실시</b> <b>신규</b></li> </ul>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요건 완화 및 면책 신청기간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b>」 제정 <b>신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송이전 단계부터 법률전문가 조력</li> </ul> </li> <li>■ 직원 마음건강 사업 운영</li> <li>■ 적극행정 실무편람 제작 <b>신규</b></li> </ul>
확산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제도관련 강의식 교육</li> <li>■ 지방공기업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관 회의(2회)</li> <li>-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우수사례 월보 제작·공유 <b>신규</b></li> <li>■ 맞춤형 적극행정 사례교육(민간전문가)</li> <li>■ 지방공기업 협업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관 회의 지속 운영</li> <li>- 적극행정 자문 대행 <b>신규</b></li> <li>- 공기업 직원 유공표창(시장) <b>신규</b></li> </ul> </li> </ul>
소극행정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행정 엄정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극행정 엄정조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센터 현황분석 적극행정팀 보고 <b>신규</b></li> </ul> </li> </ul>



## 1

##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 2021년 추진목표

-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확대구성(15명→30명) 및 활성화(회의개최 3회→6회)
- ❖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2회),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3회)

##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전담부서) 혁신과, (책 임 관) 혁신과장
- (추진체계)

구분	부	서	역	할
전담부서	혁	신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실행계획 수립</li> <li>·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li> </ul>
추진부서	감	사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li> <li>· 적극행정 관련 소관 규정 정비</li> </ul>
	정	책	기	
	법	무	담	
	총	무	과	
	인	사	과	
	시	민	봉	
	사	과		

##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의 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발굴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로 조직문화 확산

## ○ (군·구 및 지방공기업 책임관 회의 정례화)

- 적극행정 추진현황 점검 및 기관별 성과 공유
- 군·구 및 지방공기업과 연계하여 연 2회 실시

## ②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확대

○ (구성) 13명 \* 3년, 1회 연임 가능

- 당 연 직(6명) : 행정부시장, 소통협력관, 감사관, 행정관리국장, 일자리경제본부장, 도시재생건설국장
- 위 축 직(7명) : 민간위원(교수, 변호사 등)

### < 위원회 확대 개편안 > ※ 별도계획 수립(4월 중)

현 행	→	개 편 안
13명(공무원 6, 민간위원 7)		30명(공무원 6, 민간위원 24)
⇒ 분야별 외부 전문가 확대 구성으로 전문성·공정성 확대, 위원회 활성화		

○ (운영) 격월 개최(원칙적), 필요시(수시) \* '20년 3회 → '21년 6회 이상

-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안전명, 주요내용 등)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기능) 자치단체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위원회에 직접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상급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청취) 신규 \* '21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 자치단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급(군·구→시, 시→소관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 (합동회의)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전인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신규 \* '21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 (공기업자문)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21년 한시적 공사·공단 자문(의견제시) 수행 신규 \* '21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 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추진방식과 동일하게 운영

### ③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운영

#### □ 과제 발굴

- (선정) 혁신과제 발굴 T/F 연계하여 민선7기 주요현안과제 및 적극행정의 걸림돌 규제개선 과제 중 2021년도 내 적극행정을 통하여 성과창출이 필요한 과제

①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②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③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④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등

- (운영) 실적점검(추진현황 “우수,보통,미흡” 전부서 공문 통보),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가점 부여, 적극행정 관련 제도 우선 지원

#### □ 2021년 적극행정 중점과제

<p><b>①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혁신과)</b></p> <p>(현황) 지속적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함, 시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규제입증책임제*를 확산·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경제 활력 제고              *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상 규제에 대하여 규제담당자가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p> <p>(추진) <b>(21년 목표)</b> 규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211건 일괄검토 및 위원회 심사</p>
<p><b>②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b></p> <p>(현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확충 필요              * 쓰레기 독립선언(20.10월), 자원순환 자립선언(20.11월)</p> <p>(추진) <b>(21년 목표)</b> 입지타당성 조사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및 입지 최종 선정 고지</p>
<p><b>③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미래산업과)</b></p> <p>(현황) 자국 산업의 보호주의 강화 및 코로나19 등에 따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마련 필요              바이오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화 추진 필요</p> <p>(추진) <b>(21년 목표)</b>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기업 발굴 및 지원              * 컨설팅 지원 35개사, 원부자재 2개 품목              - 원부자재 국산화 공급기업 발굴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원              - 정보제공 사업 및 연구, 국산화 컨설팅, 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p>

#### ④ 국민신청제 운영 신규 ※ '21. 6월부터 시행

- (목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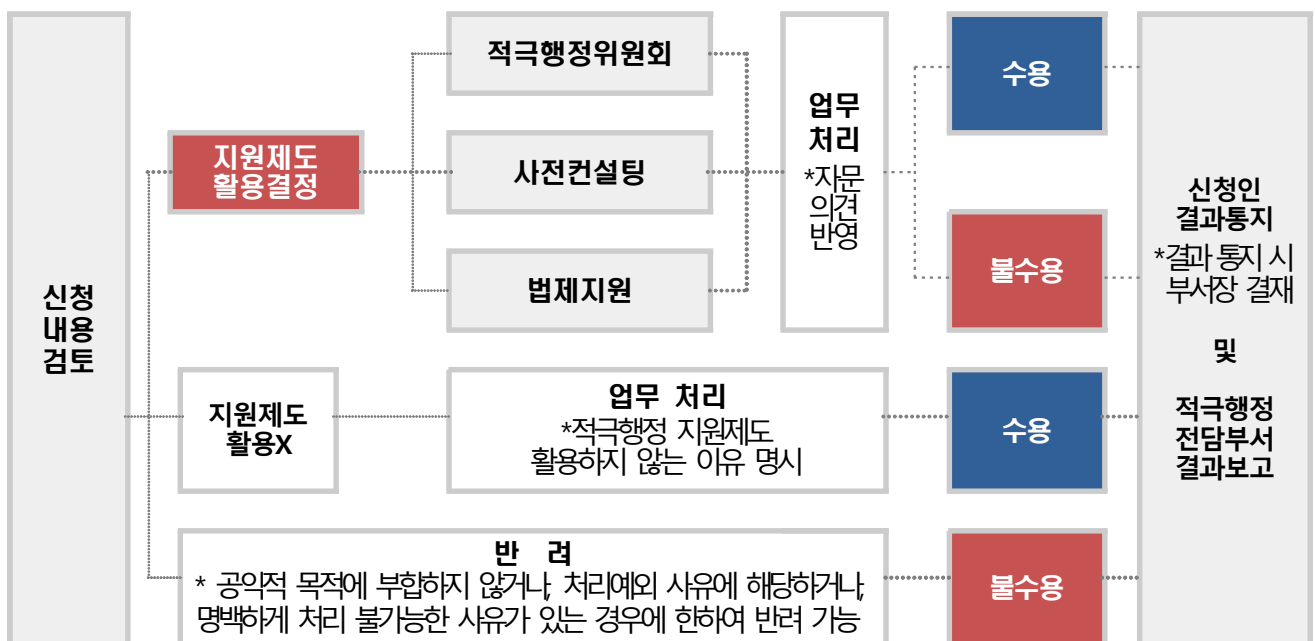
\*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요청

- (신청요건)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신청 대상	예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대상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b>可</b></li> <li>☑ <u>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u></li> <li>☑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u>반려된 사안</u></li> <li>☑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u>3가지 사유 중 하나로</u> 반려된 사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b>不可</b></li> <li>☒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u>1차 민원 또는 제안</u></li> <li>☒ 다른 법령에 의한 <u>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u></li> <li>☒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u>연관된 경우</u></li> <li>☒ 신청하려는 내용이 <u>이미 시행 중인 경우</u></li> <li>☒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li> <li>☒ <u>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u></li> <li>☒ <u>고도의 정치적 판단을</u> 요하는 경우</li> </ul>

- (운영절차)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적극행정실무TF'에서 각하 여부 1차 판단(21.6~21.12)  
- 시범운영 종료기간 이후, 각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각하여부 1차 판단(22.1~)

#### <업무 흐름도>



## 참고자료

※ 시범운영 기간('21.6.~'21.12.) 동안의 처리 절차를 도식화한 것임

① 신청 및 접수	국 민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개인, 법인)
	적극행정 홈페이지 (적극행정 온)	신청 요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u>반려된 사안</u>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방법	❖'적극행정 온'의 '국민신청제' 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시 작성 항목	❖신청인이 직접 담당기관 및 처리부서 지정 ❖기 제기한 민원·제안의 처리결과를 증빙자료로 제출 ❖△반려사유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령 정비·해석 요청내용(대상법령, 해석결과 등), △법령 정비·해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② 처 리	적극행정 실무 TF	각하여부 1차 판단	❖국조실 주관 적극행정 실무 TF에서 각하여부 1차 판단
	적극행정 담당부서	각하여부 2차 판단	❖신청인이 지정한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는 신청내용 열람 가능 ❖소관이 아닌 경우 소관변경 신청(→인사처, 행안부) ❖신청인이 지정한 처리부서에 전달하거나, 처리부서가 불명확· 부적절한 경우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u>신청 내용 전달</u>
		내용 전달	❖적극행정 담당부서에서 <u>처리부서로 내용 전달</u>
	처리부서	처리 시 유의사항	❖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 명백한 반려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 *(명백한 반려사유로 인정되는 사항)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해결이 가능한 경우 △'처리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및 처리 상황을 신청인과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통지해야 함 ❖'처리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인, 적극 행정 전담부서에 통지해야 함
③ 사 후 관 리	적극행정 담당부서	관리사항	❖처리부서의 접수처리현황 관리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국민신청제 접수처리현황 등을 적극행정위원회에 월별 보고하여 기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인사처(중앙부처), 행안부(지자체)에 실적 제출
	인사처 행안부	관리사항	❖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

## 2021년 추진목표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상·하반기, 연 25명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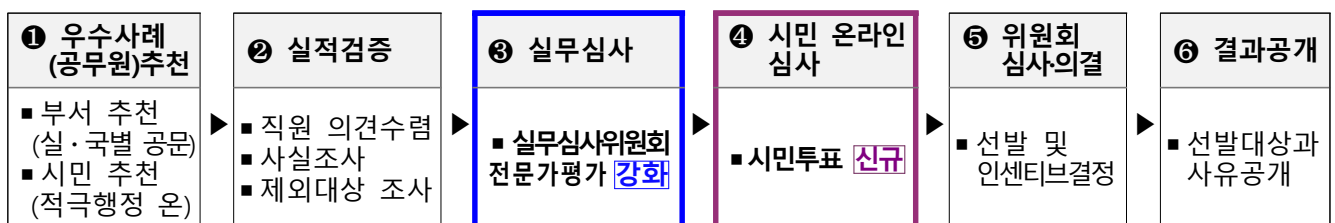
##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혁신과 주관

- (추진방향) 적극행정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인식 확산시켜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
- (선발시기) 상·하반기(6월·12월)
- (선발규모) 총 25명 내 \*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미선발 할 수 있음

- 최우수(11) : 특별승진(1) 특별승급(1),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3), 실적가점(6)
- 우수(4) : 장기교육훈련(2), 희망전보/근속승진기간·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2)
- 장려(10) : 특별휴가(3일) + 포상금(1인 80만원) 인천e음

- (선발대상) 인천시 소속 전 직원 \* 소방 포함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비정규직 직원 등\*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선발 대상으로 확대 \*구체적 사례 성과, 기여도 등 종합적 고려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가 기관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선발 가능(전담부서 업무, 사전컨설팅 심사, 소극행정 관리 담당자 등)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 기타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선발기준) 시민체감도, 중요도·난이도,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확산가능성
- (선발절차)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인사과 주관

### □ 인센티브 부여

- (부여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인사상 우대조치)
- (부여원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1개이상 반드시 부여
- (부여시기) 우수공무원 선발 후 희망 인센티브별 심사위 거쳐 적시 반영
- (부여기준) 적극행정 노력도, 성과의 탁월성, 대상자 희망, 인사여건 등 고려

### □ 인사상 인센티브

- (특별승진) 4급이하 공무원 대상 1계급 승진 임용
-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 1단계 승급
- (근속승진기간 등 단축)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실적가산점) 상·하반기 근무평정 시 1.5점 범위내 가산점 부여
- (희망전보) 필수보직기간 경과전이라도 희망부서로 전보
- (교육훈련)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 우선 선발
- (기 타) 특별휴가 부여, 포상금 지급

\* 단, 특별승진, 승급, 성과상여금 등 적극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결정 (성과 부족시 미선발 가능)

\*\* 희망전보는 인사과 공감인사위원회를 거쳐 전보여부 최종결정

### □ 추진일정

- 실적가산점 심사 및 점수부여(실적가산점 심사위원회) '21. 5, 10월
-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등 심사(인사위원회) '21. 하반기

## 2021년 추진목표

- ❖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1회), 찾아가는 참여형 사전컨설팅 코너 운영(분기별)
-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 제정(4월)

##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정책기획관실 주관

## □ 추진방향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할 중요사항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장 직접 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사무전결 처리규칙 운영

- 「인천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조문 신설('19.12.16.)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칙개정) 조직개편 후 수시
  - 사무전결 개정 수요조사('21년 하반기 조직개편 후) : 2021. 7~9월
  -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 2021. 11월중
- (개정방법)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 명확히 구분 후 재정비 계획 수립

##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
- \* 일반적으로 직위를 갖지 않는 5급(기초 6급) 이하 공무원을 의미함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

※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 ②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 사전컨설팅 제도 ※ 감사관실 주관

- (제도개요)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직자 등이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로 적극행정 구현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청주체) 시 및 군·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대상기관  
\* (신청범위 확대)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에 포함('20.2월 규칙 개정)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신청대상)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 (제외대상)
  -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 관련 사항
  -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요구 받은 사항
  -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신청기관 자체해결 가능한 사항
  -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 등
- (효 력)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면제 가능
- (운 영) 찾아가는 참여형 사전 컨설팅감사 코너 운영 : 반기별
  - 사전 컨설팅감사 만족도 조사 : '21. 11.
  - 시장 표창 수여 (공무원 2, 민간인 2 \*기준 2명에서 확대) : '21. 12.
- (홍보강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및 홍보
  - \* 계약심사 결과 통보 시 카드뉴스 지속 홍보·안내

#### <카드뉴스 활용 안>

**각종 사업,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사전 컨설팅감사로 신속적극행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 ☎032-440-3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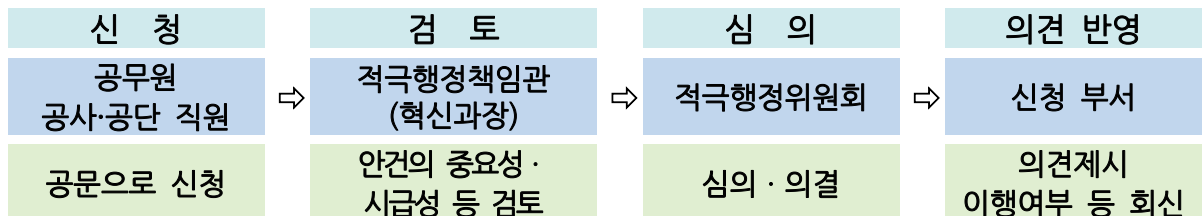
##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혁신과 주관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 ○ (추진개요)

- (운영기간) 연중
- (신청대상)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공무원  
\* 지방공기업(공사·공단) 포함
- (신청방법)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신청서 작성 후 부서장 결재를 받아 적극행정 전담부서(혁신과)로 공문 송부
- (절 차)



### ○ (의견제시 효과)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 (상급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청취) 신규

- 자치단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상급(군·구→시, 시→소관 중앙부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 ○ (합동회의)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전인 경우 합동회의 개최 가능 신규

❖ (합동회의 심의 대상)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사안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등

#### 4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 운영

※ 감사관실, 인사과 주관

##### □ 적극행정 면책 제도

- (제도개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제도
- (추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4
- (신청주체)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및 기관의 장
  - \* 수감자의 신청이 없어도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 직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처분이전
  - \*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 (면책요건) 공익목적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 (면책방향) 감사기간 내 신청 건은 감사종료 전 현장면책 심의·통보하고  
감사종료 후 신청 건은 처분요구 전 심의·통보

##### □ 징계 등 면제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 심의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19. 8. 6. 시행)
  - 징계 등 혐의자가 의견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징계 의결서에 반영
- 중소기업 ombudsman 징계감경·면제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 업무관련 비위로 징계요구 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시 '중기 ombudsman 징계면책 건의제도' 안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 중소기업 ombudsman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감경·면제 건의(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19년 ~ '20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실적
  - 자체감사 : 2건 신청 → 불인정
    - \* 필수 행정절차 누락, 법령 자의해석, 사전검토 미흡, 중요사항 보고누락
  - 정부합동감사 : 4건 신청 → 4건 모두 인정("훈계" 면책)
    - \* 일부 행정절차 누락 있으나 공공 이익, 당사자 사적 관계없고 하자 치유 노력
- 문제점
  - 면책 불인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면책 신청 기피
  - 면책심의회 중립성·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문성 확보 필요
  - 적극행정 면책 실적을 의식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의 질 저하 우려

## □ 향후 추진계획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 추진
  - 감사 개시 전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홍보 강화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배너 제작 및 설치
- 적극행정 면책 심의회 구성·운영 내실화로 신뢰도 확보 추진
  -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직원을 위원으로 선정·심의참여 확대
  - 지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및 필요시 변호사 자문 등 의뢰
- 중앙 및 지방 적극행정 면책사례 수집 및 사례집 발간·배포 추진

## ㉕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 적극행정 법제지원

※ 법무담당관실 주관

- (시기) 수시
- (지원부서) 법무담당관
- (주요내용) 입법컨설팅, 법제심사 등 입법 지원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 확보

## □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지원

※ 혁신과 주관

- 중앙부처 법령 유권 해석 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연계
  - 「내고장 알리미」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4대 주요 인·허가, 경제·사회 분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자료를 시 홈페이지 연계
  - 인·허가 담당자가 DB 구축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정보공유 미흡, 법령이해 부족 등에 따른 반복적 유권해석 요구로 중앙·지방간 업무증가 및 인·허가 처리 지연 예방

## □ 법률지원

※ 법무담당관실 주관

- (지원대상)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공무원의 형사 및 소송사건
  - (주요내용)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형사 및 소송사건에 대해 시 소속 법률고문을 활용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지원
  - (처리절차)
    - 직무관련 소관부서의 장이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법무담당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 요청(직무관련 소관부서 → 법무담당관)
    - 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법무담당관)
      - \*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 확정 또는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

  - (추진부서) **혁신과** (감사관, 법무담당관, 인사과 협업 추진)
  - (추진일정) 정부표준안 반영하여 지침 제정 ('21.상반기)
  - (주요내용) 소송 이전 단계부터 면책기준 소명 등 법률전문가 조력 지원
- (연도별 현황)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 총 4건 ('18년 2건, '15년 1건, '14년 1건)

## □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 총무과 주관

- (목적) 직무 관련 피소시 손해배상액 및 소송비용을 보장하여 직원 보호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손해배상 공제가입
- (보장내역) 2021년도 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 (총무과-4946호, '21.3.19.)

구 분		보 장
보방범위	민사	1건당 5천만원 한도
	형사	1건당 3천만원 한도
보장대상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소방본부 별도 가입
보장인원		4,105명
연간총액		3억원 한도

※ 최초가입 2017년, 사건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 구상권 행사 제한 ※ 법무담당관실 주관

- (적용대상) 소송해태 등 귀책사유가 없는 소송담당자
  - \* 인천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0조(구상권 행사 등)
- (주요내용)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 재산상 권익 보호
  - 소송해태 등 귀책사유로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 \* (소송비용 구상) 법무담당관실, (판결금 구상) 직무관련 소관부서

## □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 ※ 총무과 주관

- (사업명) 스트레스를 부탁해!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 (추진부서) 총무과(심리지원 총괄), 시민봉사과(힐링캠프)
- (추진내용) 심리상담 지원(심리상담센터,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조직 심리진단, 불면증 프로그램 운영, 체험프로그램 등 단체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 □ 적극행정 실무편람 제작·배포 ※ 혁신과 주관

- 적극행정 제도 및 공직생활 적용 사례 등 안내 책자 제작 ('21.4월)

## 2021년 추진목표

- ❖ 적극행정 집합교육(3회), 사이버교육(현원 50% 이상 이수),
- ❖ 적극행정 관련 보도자료 제공(5회 이상, 중점과제 기획보도 추진)

## ①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 적극행정 집합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

- (집합교육)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강사선정) 시, 군·구 행정과 연관된 규제혁신 사례의 민간 전문가, 기업가 섭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혁신처 등 인력풀 활용
- (주요내용) 사례중심 교육 총 3회 이상
  - 전 직원 대상 교육(1회), 적극행정 군·구 및 공사·공단 담당자 교육(1회), 인·허가 담당 심화교육(1회)

## □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

- (추진부서) 인재개발원
- (개설과정) 상시(3과정), 심화(1과정), 소양(2과정)

구분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횟수	교육시간	비고
상시	신임인재양성과정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의 이해	5회	2시간	집합교육
			5회	2시간	사이버교육
	공직자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	8회	2시간	사이버교육
	e-적극행정의 이해	e-적극행정의 이해	10회	3시간	사이버교육
심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적극행정의 이해 등	1회	7시간	사이버교육
기타 (소양)	핵심중건간부양성과정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1회	4시간	집합교육
	글로벌인재양성(영어)	청렴교육, 적극행정	1회	5시간	집합교육

## □ 상시학습 인정 시간 확대

- (주요내용) 「적극행정 관련 연구 보고서」 상시학습 시간 인정
- (학습인정) 최대 20시간까지 상시학습 인정·확대 (편당 5시간)
- (인정절차) 부서장 확인 → 혁신담당관 협조(감수) → 인사과 제출

## ②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협업체계 구축

### ○ (추진배경)

- 지방공기업(공사·공단)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적극행정 구현

\*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

### ○ (대상) 5개 공사·공단

-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 ○ (전담부서)

기관명	전담부서	책임관	비고
인천교통공사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장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처	기획조정처장	
인천관광공사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인천시설공단	감사실	감사실장	
인천환경공단	감사혁신실	감사혁신실장	

###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 상호연계
-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정례화(연 2회)
  - \* 시, 군·구, 공사·공단 적극행정 시책, 우수사례 등 공유
- 시 주관 적극행정 교육 지원
  - \* 적극행정 담당자교육, 적극행정 사례교육 등 참여, 적극행정 강사풀 공유
- 정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시 선정위원회 선정
  - \* (상·하반기) 시, 군·구, (하반기) 시, 군·구 + 공사·공단
- 우수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유공 표창(시장)
- 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공사·공단) 자문 대행



### ③ 시민참여 확대 및 적극행정 붐업 조성

#### □ 적극행정 홍보

- 기관장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 표출로 직원 적극행정 동기 부여
  - 업무지시, 언론기고, 적극행정 관련 행사 참석
-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언론보도,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및 SNS 카드뉴스 게시
  - 반상회보, 굿모닝 인천, 인천e음 플랫폼 활용
  - 각종 적극행정 관련 행사, 우수사례, 범정부적인 홍보컨텐츠 활용
- 혁신주간 행사 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하여 기관의 핵심사업, 규제개혁, 갈등 및 장기·집단민원 등을 신속히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과 행정효율을 향상시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 발굴
- (시기) 수시
- (발굴방법)
  - 전국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월보 제작·공유 [신규](#)
    - (방법) 사례 수집 → **우리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관련부서 지정** → 자료화, 배포
    - (게재주기) 월 1회 (전파) 공문, 공지사항, 업무정책포털 생각+,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 (인센티브)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성과** →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항목 신설 및 가점** 부여
  -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비 사례 발굴
    - 경진대회 참가 사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우대
- (활용방안)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 및 카드뉴스·SNS를 통한 홍보

#### □ 시, 군·구, 공사·공단 적극행정 협업 확산

- 책임관 회의 정례화, 맞춤형 심화교육, 사례전파, 실적관리, 유공 표창 확대 등

## 2021년 추진목표

❖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현황 등 분석 후 적극행정위원회 보고

###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자체점검 시 적발된 비위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
  - 고의적, 상습적(2회 이상) 사례에 대하여 엄정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지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6개월 가산 적용하여 소극적인 직무행태를 보인 공무원을 더욱 엄정하게 제재

### □ 소극행정 현장 점검

- 기 간 : 연중 \* 수시 복무점검과 및 중앙부처와 합동 점검 실시
- 대 상 : 시, 산하기관 및 군·구
- 점검사항 : 소극적 행정 행태, 규제남용, 진입제한 등
- 조치사항 : 점검결과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하고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 개선 유도

### □ 적극행정위원회 보고 신규 \* '21년 적극행정 운영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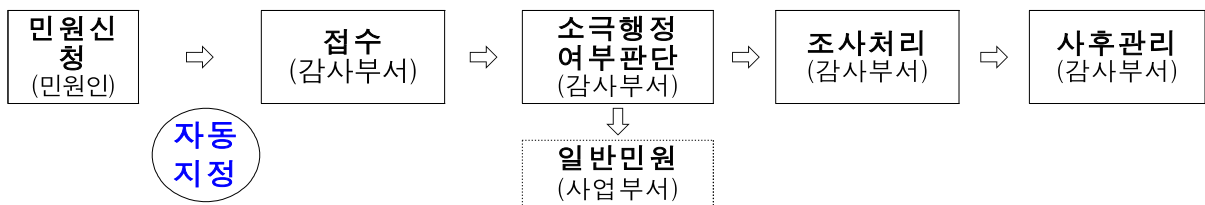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

##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처분 시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6개월 가산 적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19.11. 5. 시행)

## ②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
  - 감사부서에서 우선 검토 및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세부절차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예시)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③ 인·허가 거부시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 시민봉사과 주관

- (표준설명서식 활용)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경우 회신 시 민원인에게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하여 법적근거와 불허가 사유, 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시행
  - 표준설명양식 활용 안내 및 교육실시
- (표준설명서식 활용 여부 점검)
  - 점검기간 : 수시
  - 점검대상 : 서식민원 중 거부 처분한 인·허가건

**VII**

**2021년 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 용	예산액	비 고
합 계		17,800	
일반운영비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600	
	■ 적극행정 교육	4,200	
	■ 적극행정 관련 홍보	2,000	
포상금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8,000	

**VIII**

**행정사항**

□ (혁신과) 적극행정 실행과제 추진현황 자체점검 : 6, 9, 11월

○ 부진과제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논의

□ (전부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걸림돌 과제 지속 발굴 :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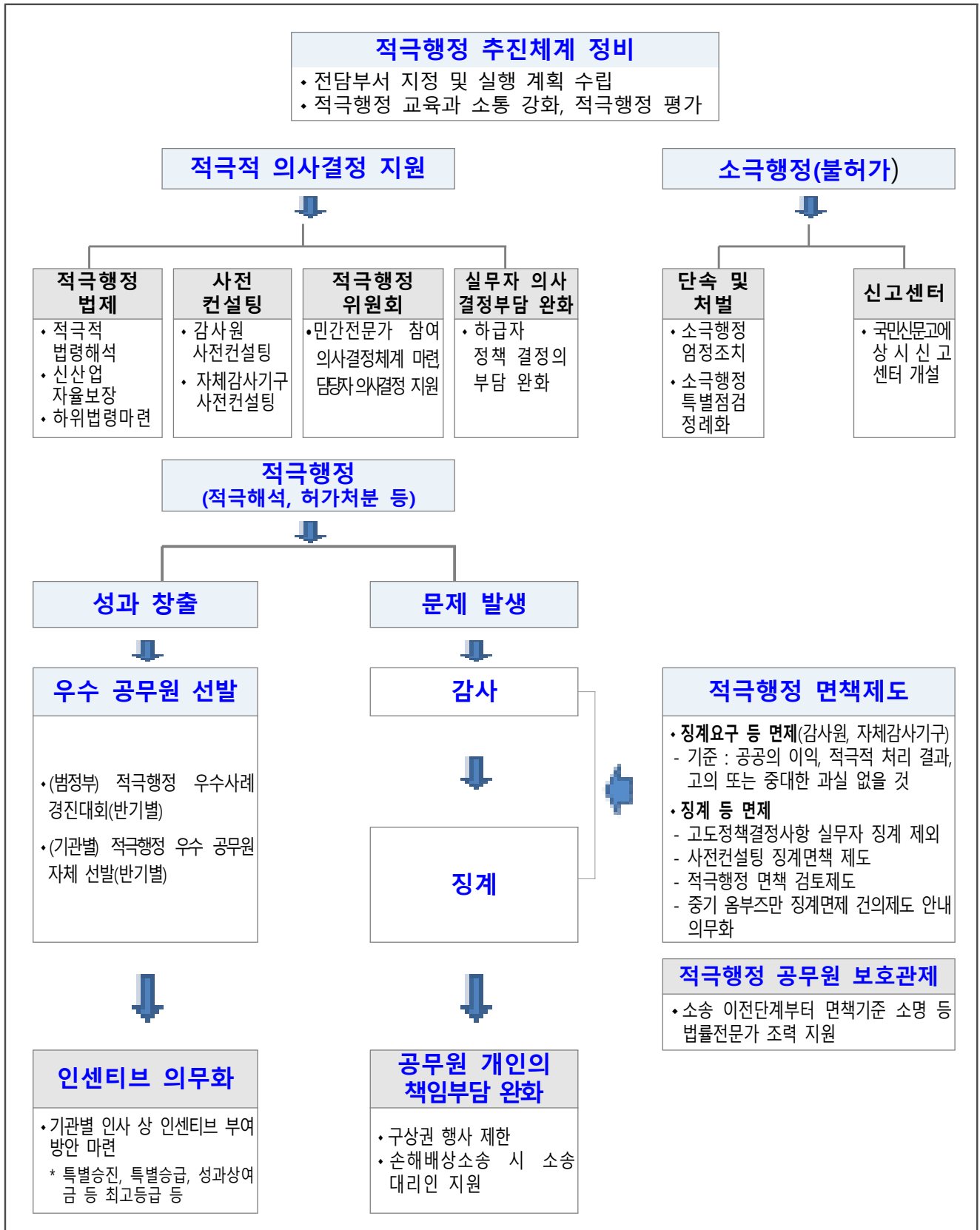
## □ 추진체계

구분	부 서	역 할
전담 부서	혁 신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li> <li>·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실행계획 수립</li> <li>·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li> <li>·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li> <li>· 적극행정 문화 확산</li> </ul>
협업 부서	감 사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컨설팅제도 운영</li> <li>· 소극행정 점검</li> <li>· 소극행정 엄정 조치</li> <li>·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운영</li> </ul>
	정책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li> </ul>
	법무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법제지원, 소송지원</li> </ul>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배상공제 가입, 직원 복지 서비스</li> </ul>
	인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인재개발원)</li>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li> <li>· 징계 등 면제</li> <li>· 소극행정 공무원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li> </ul>
	시민봉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li> </ul>

## 참고2

## 과제별 추진일정 및 추진부서

과 제 명		추진부서	일정	비고
<b>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확립</b>				
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혁 신 과	계속	책임관회의(반기)
②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	혁 신 과	격월	위원수확대(4월)
③	적극행정 협업체계 구축	혁 신 과	연중	
<b>②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체계 강화</b>				
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혁 신 과	6·12월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인 사 과	6·12월	
<b>③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b>				
①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정책기획관실	11월	
②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감 사 관 실	연중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혁 신 과	연중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 제도	감 사 관 실	연중	
	- 징계 등 면제	인 사 과	연중	
④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무담당관실	연중	
	-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지원	혁 신 과	연중	
	- 법률지원, 구상권 행사 제한	법무담당관실 (전 부 서)	연중	소송지원지침 제정 (4월 혁신과)
<b>④ 시민체감 적극행정 문화 확산</b>				
①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적극행정 집합교육 실시 및 사례 전파	혁 신 과	연중	
	- 적극행정 상시 교육체계 구축 상시학습 인정 시간 확대	인 사 과	2월	
②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혁 신 과 (전 부 서)	4월	
③	기관장 중심의 적극행정 불업 조성	혁 신 과	연중	
	- 적극행정 홍보,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혁 신 과	연중	
<b>⑤ 소극행정 혁파</b>				
①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점검	감 사 관 실	연중	
	- 징계처분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 가산	인 사 과	연중	
②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 신고센터(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감 사 관 실	연중	
	- 인·허가 거부시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시민봉사과	연중	



□ **적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 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 적극행정 유형

###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 소극행정 정의

-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p>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li> <li>·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li> <li>·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li> </ul>
업무 태만	<p>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p> <p>◆ 판단기준&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느장 대응 등의 행태</li> <li>·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li> <li>·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li> </ul>
탁상 행정	<p>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p> <p>◆ 판단기준&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li> <li>·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li> <li>·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li> </ul>
기타 관중심 행정	<p>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li> <li>·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li> <li>·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li> <li>·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li> </ul>

## 1 규제입증책임제운동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주관부서	혁신과	관련부서	전부서
담당자	고선희	연락처	440-1649

## □ 과제개요

- (제도개요) 자치법규 상 규제에 대하여 규제담당자가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
- (추진목적) 수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시민, 기업 등) 중심의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및 대시민서비스 확대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추진대상) 자치법규(조례, 규칙) 규제 및 건의과제
- (추진내용) 규제입증책임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완화·폐지)
- (추진일정)

① 계획수립 및 과제 통보	② 규제필요성 1차 검토	③ 규제필요성 2차 검토	④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⑤ 추진상황 관리
2~3월	3~4월, 수시	3~4월, 수시	4월, 수시	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대상 과제 선정 및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관부서 규제 필요성 검토 및 관리카드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필요성 검토 및 위원회 안전 상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규제 개선 및 존치여부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 개선계획 수립</li> <li>■ 분기별 점검 및 이행 독려</li> </ul>

## □ 추진경과

- ('19. 7.) 인천광역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행정안전부 도입 권고, '19.3.)
- 인천연구원 국토·도시개발 분야 조례·시행규칙 비교 연구 용역을 통한 규제입증책임제의 자치법규 적용
  - ('19.12.) 연구과제 선정: 국토·도시개발분야 자치법규 116건
  - ('20. 9.) 연구결과: 검토건수 116건(존치 105건, 개선 11건)
  - ('20.12.) 연구결과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조회: 15건(존치 13건, 개선 2건)

- ('21. 3.)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기존규제 심의

※심의결과(15건): 존치필요 13건, 규제완화 2건

- 규제입증책임제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등록규제(위임사무) 개선 추진

- ('21. 2.) 2021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계획 수립

- ('21. 3.) 소관부서별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작성 및 제출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해 현장과의 소통 제한으로 시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 (규제개혁체감도) 97.2('18년) → 94.1('19년) → 93.8('20년) (한국경제연구원)

- 지역의 주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에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적용 필요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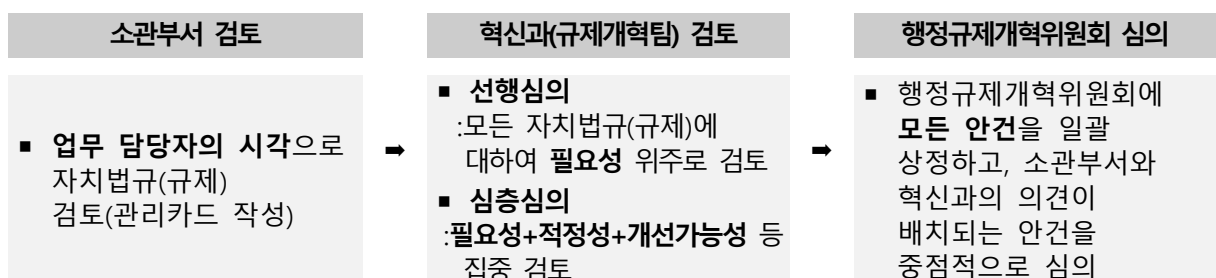
- (성과목표) 규제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규제 개선 활성화 추진

※ '21년 목표: 위임사무 211건 규제 검토 및 존치 필요여부 위원회 심사

- (기대효과) 시민 생활 및 기업 영업상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및 경제 활력 제고

## □ 향후 추진계획

- 자치법규 규제 3단계 검토를 통한 규제개선 추진



○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 (혁 신 과) 부서별 자치법규 목표량 설정 및 이행상황 관리

< 목표량 >

□ 자치법규 등록규제 중 위임사무 211건 일괄검토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목표(건)	553	211	208	134	자치법규 등록규제 총798건 중 위임사무 553건 대상

※ 부서별 위임사무 규제 비교검토 목표량 부여를 통한 개선 필요규제 발굴 및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 독려

- (소관부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원점 재검토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선 대상 자치법규 개정 추진

< 정비기준 >

① 법령 체계상 불합리한 규제 ②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 ④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제·개정된 지 오래된 규정 등) ⑤ 기타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 등

< 규제개선 >

□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작성 및 규제개선 대상 자치법규 개정 추진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개정 완료 시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인정

## 2

##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	관련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이해진, 임지혜	연락처	032-458-7083

## □ 과제개요

- (사업목적)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 우리시 자원순환 목표 달성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확충
- (사업규모)

구분		권역별 계획								
용량	총계	기존시설(대보수)			신규 설치				비고	
		소계	연수구 자원순환 센터	서구 자원순환 센터	소계	중구 자원순환 센터	남동구 자원순환 센터	동부권 자원순환 센터	강화 자원순환 센터	용진
						중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	용진
시설 필요량	1,744	574	228	346	1,158	326	338	456	38	12
설치 예정량	1,895	950	530	420	945	250	350	300	45	-

- (사업기간) 2021. ~ 2025.
- (총사업비) 6,576억원

## □ 추진경과

- 2020. 7.29.: 공론화 위원회 개최결과 정책 권고사항 발표
  - 기존 광역시설 현대화 및 부족용량 미설치 지역 광역 설치
- 2020.10.15.: 쓰레기 독립선언
  - 시민공동행동 발표, 기존시설 축소 및 권역별 광역소각장 확충계획 발표
- 2020.11.12.: 자원순환 자립선언
  - 기존시설 2개소 현대화, 권역별 4개소 신규 설치
- 2020.11.26.: 남부권 자원순환 정책협의회 구성(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공동 대응 합의문 발표
- 2020.12. 8.: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0.12.21.: 남부권 정책협의회 합의사항 공문 제출(3개 구→시)
- 2020.12.31.: 서구 자원순환센터 추진방안 제출(서구→시)
- 2021. 1.29.: 남부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기본계획」 제출(3개 구→시)
- 2021. 2. 3.: 인천광역시-서구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 협약 체결
- 2021. 2.22.: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기본협약 체결 2차 연기
  - (사유) 부천주민 및 지역구 의원 반발 ※ 2020.11.10. 1차 연기
  - (광역화) 인천시(부평·계양권역), 부천시, 강서구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남부권 정책협의회”의 건립계획 조정요구에 따라 자원순환센터 적기 건립시기(2025년) 지연 우려
- 부천자원순환센터 광역화 난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천시의 과도한 추가 인센티브 요구 예상
- 주민 뿐만 아니라 시, 군·구 공무원들 조차 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 및 사회적·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부족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자원순환기본법」(2018. 1.),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환경부, 2020. 9. 23.)” 및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이행
- ‘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안정적인 처리시설 마련
  - ※ 입지타당성 조사 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및 입지 최종 선정 고지
- 최신 신기술 검토 및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친환경 시설 마련

## □ 향후 추진계획

- 市 내부 행정절차 사전 준비·시행으로 물리적 소요기간 단축
  - 법정 용역(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발주도서 작성, 계약심사·일상감사 협의(감사관실)
- 부천시와 수용 가능성 범위 내에서 광역화 기본협약(안) 협의 및 市 관내(부평·계양구) 신규 건립을 위한 절차(관계기관 협의 등) 병행 추진
- 군·구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 시행으로 정책 이해 도모
  - 폐기물 발생량 산정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 시민 대상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교육, 시설 견학 등 추진
  - 자원순환시설 확충 필요성 적극 홍보 및 당위성 확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
  - 자원순환정책 교육·시설 견학 등 추진으로 자원순환센터 이미지 제고
  -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 전달로 신뢰도 향상
- 입지 결정 시, 주민 공론화 합의 진행 및 설치 지역 인센티브 강화
  - 지역발전기금 지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
  - 타 지역(군·구) 폐기물 반입시 가산징수금제 도입 등
- 최신 신기술 검토 및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 및 친환경 정책 실현
  - 선진기술 도입으로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실현
  -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 구축
  - 주민감시협의체 구성·운영 및 제4차 산업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앱·전광판 등)

### 3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관련부서(기관)	TP, 상의, KCL*
담당자	이태섭	연락처	032-440-3103

\* TP : 인천테크노파크, 상의 : 인천상공회의소, KCL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과제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
- (사업비) 300백만원(시비) ※ 국비확보 추진
- (대상기업) 인천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
- (사업내용) 컨설팅, 자금지원, 정보 및 기술지원 등 제공

##### ①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국산화 희망기업 발굴, 컨설팅 지원, 생산기업과 수요기업 매칭 및 사업화 지원

##### ② 바이오산업 정보지원 플랫폼 구축

·원부자재 디렉토리 구축, 바이오 관련 국내외 산업동향 등 정보 제공

##### ③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공모과제)

·글로벌 수준의 시험평가, 신뢰성평가 및 실증화, 사업화 등 기업 지원

##### ④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기업 등 집적화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관련 국내외 유망 중소기업 유치활동

·바이오 지원기관 협회 지부 유치

##### ⑤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의 조기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각 기관별 실무사항 공유·협업 및 국산화 업무 지원 등

#### ○ 사업추진체계

시	인천TP	인천상공회의소(상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총괄	행정지원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30개 품목의 국산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 □ 추진경과

- 2018. 5. : 민선7기 시장 공약 인천 바이오헬스 밸리 발표(B-MEC벨트)
  - 2019.12.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업무협약(셀트리온 등 9개 기관)
    - 국산화 대상 30개 품목 선정(환경배지, 바이러스필터, 멸균기 등)
  - 2020. 2.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원부자재 품목별 전담업체 지정\*
- \* 셀트리온(TOC Vial, O-Ring, Gasket), 삼성바이오(Filter for Bio-burden test in QC Lab) DM바이오(환경배지(TSA,SDA)), 바이넥스(autoclave pouch)



- 2020. 5. :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기업 유치(아미코젠\*)
  - \* (본사(경남 진주) 이전 예정) 투자금액 420억원, 고용효과 120여명
- 2020.11. :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수요기업)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공급기업) 정현프랜트, 위아텍
- 2020.12. : 국회 '21년도 예산 과정\*에서 국비 미반영(센터구축)
  - \* 국회 상임위 예산소위 심의(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통과, 예결위 심의 미반영
- 2021. 3.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추진계획 수립

##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중소 제조기업의 바이오산업 진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부족
  - 기업 설명회 및 일반 컨설팅 추진(연간 35개 업체 이상)
- 바이오 원부자재 제품 인증 및 컨설팅에 많은 비용·시간 소요\*
  - 바이오 수요기업의 원부자재 제원 등 확인, 생산가능여부 검토
  - 희망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 \* 바이옥스'18년 세정제 국산화, 삼성바이오 공급 : 국산화 기간 3년, 2억원 인증 비용 발생
-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기업과 수요기업간 상호 매칭 미흡
  -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수요기업 매칭 지원
    - ※ 바이오 수요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서 부터 공동참여(바이오수요기업 평가위원 참여)추진
-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국비 확보 미흡
  - 2022년 산업부 기반구축사업에 예산 반영토록 협의

##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21년 국산화 추진(컨설팅 지원 35개사, 원부자재 2개 품목)
- '22년 국비 확보(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 □ 향후 추진계획

- '21. 4~ : 희망기업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추진, 1·2차 컨설팅 실시, 사업화 지원, 정보지원 플랫폼 구축
  - ※ '21년 사업 추진 결과, 원부자재 국산화 추진 실적 및 남동산단 연계 효과 발생 시, 사업규모 확대 및 예산 증액 추진
- '21. 5 : '22년 센터 구축관련 국비 확보 추진(22년 공모사업 선정)